

## 신문 사설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의 담론적 양상\*

김 현 강

### Abstract

**Hyungang Kim.** 2015. 9. 30. **Discursive Aspects of Multiculturalism in Newspaper Editorials.** *Bilingual Research* 60, 29-58.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lticultural discourses of news editorials focusing on discursive aspects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since 2000. The analysis of multicultural discourses was based primarily on Kymlicka's approaches to multiculturalism and Castles and Miller's models of immigrant policies. The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of a multicultural discourse can be explained using three types of models: 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the assimilationist model, and the multicultural model. The discourse structures of the editorials embody a process of argumentation including circumstantial premises, values, claims and argument. Accordingly, discourse analysis of multicultural discourse reveals various conceptions or views of multiculturalism. The analysis shows that multicultural discourses in Korea have an assimilationist view and focus exclusively on multicultural families. The central claims of these discourses concern accepting immigrants in the name of multiculturalism, but their underlying values advocate assimilating immigrants into Korean culture and society. Korea's multicultural discourses, therefore, do not accept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but only reflect assimilationist views and treat multicultural issues selectively. Those issues are limited to antiracism and the civil rights of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ather than for immigrants as a whole. In light of other immigration societies' experiences of conflicts arising from unilateral assimilation, Korea needs to further discuss and carefully reconsider the direction of its multicultural society. (Yonsei University)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27).

**【Key words】** multiculturalism(다문화주의), multicultural discourse(다문화 담론), news editorials(신문 사설), multicultural families(다문화 가정),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차별 배제적 모형), assimilationist model(동화주의 모형), multicultural model(다문화 공존 모형)

## 1. 서론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한국 사회도 체류 외국인이 100만 254명(단기 체류 포함)을 기록하여 국내 주민등록인구의 2%에 이르렀다. 이 추세로는 2020년 5%, 2050년 9.2%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이른바 이민사회나 다문화 사회로 여겨지는 외국인 10% 시대(OECD 국가 수준)<sup>1)</sup>도 머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증가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이 컸고<sup>2)</sup>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상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2001년 유엔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현재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총 1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도 한다(윤인진 2008). 따라서 학계에서도 한국 사회의 변화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에 관한 정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책 입안이나 실행이 전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진경(2010)에서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 내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다른 관점이나 해석이 존재하며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고 하였다. 논의의 부족도 문제이지만 논의를 구성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공유되

---

1) 이민사회로 인식되는 이민자 비율에 대해 학계의 합의는 없으나 서구 선진국 주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10%(1999년), 독일 12.9%(2003년), 영국 9.3%(2004년), 캐나다 10.9%(2004년), 미국 12.2%(2004년) 등 약 10% 전후가 기준이 된다(Lemaitre and Thoreau 2006).

2) 국제결혼은 2006년에 약 13%, 농촌 지역은 33%에 이른다. 1990년대에 본격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도 2006년 45만 명에 이르렀다.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인종화(또는 다민족화)되는 현상 자체를 다문화 사회로 이해하고 이주해 온 다른 인종 또는 민족(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없는 태도(주로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태도)를 막연히 다문화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구학적 현상과 문화적 공존 상태, 개인적 태도와 사회적 가치, 규범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윤인진(2008)에서는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학적 사실은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식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고 하였다. 박진경(2010) 역시 “다문화주의란 사회통합적 관점에 의한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합의된 실천이념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다문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을 전제한 실천적, 사회적 이념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다문화와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다문화라는 사회적 가치 등이 어떻게 담론화되는지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관찰하고자 하는 담론의 영역은 대중의 인식이나 여론, 정책 논의가 드러나는 신문 사설이다. 지금까지는 정책과 언어교육 등 정부가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창출하는 담론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할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적 논의를 구성하는 담론적 행위를 수행한다. 특히 사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사설의 다문화 담론 분석은 이 사회의 다문화주의적 관점과 논의의 현재를 보여 주는 동시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대상

1920년대부터 1999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검색한 결과 ‘다문화’라는 말이 한국의 신문에 등장한 것은 대략 1990년대이다. 이때만 해도 주로 외국의 다문화사회를 지칭하는데 쓰였고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다문화적 현상을 언급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sup>3)</sup> 본격적인 등장은 2000년대 이후이며 1990년대의 단기 노동 이주, 2000년대의 결혼이민자 유입, 그에 대한 정부의 다문화 정책 등이 요인이 배경이 되었다. 물론 외부적 요인으로는 한국 사회 내의 차별과 문제에 대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네스코 등 국제 사회의 압력이나 오래 전부터 영향력을 확대해 온 다문화주의의 세계적 흐름도 작용하였다(박진경 2010). 2000년대 이후의 논의 중에서 사건 보도 기사를 제외하고 논평과 견해가 드러나는 사실은 특히 2005년 이후에 논의가 집중된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다문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언론의 다문화 담론도 양산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최근의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 검색 서비스(KINDS)를 이용해 검색하였다. 본문에 ‘다문화’란 키워드를 포함한 경우는 특정 대상이나 사건을 지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므로 다문화 담론의 주제를 벗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자료

- 
- 3) ‘다문화’라는 말은 1991년 3건, 1992년 4건, 1993년 1건, 1994년 2건, 1995년 8건, 1996년 12건, 1997년 24건, 1998년 9건, 1999년 18건이 나타났다. 1996년 ‘21세기와 국제이해교육’(한겨레신문 1996.5.13.) 외 몇 건의 기사에서 한국 사회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다문화적 현상을 다루기 시작했다(김현강 2015).
  - 4) 외국인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자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다문화정책을 세운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서인데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 2007년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1 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이다. 정부문서에 ‘다문화정책’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7년 문화관광부의 ‘다문화정책팀’이라는 부서명에서이다. 이 대책은 이후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으로 수정되었다(박진경 2010).

를 대상으로 제목에 키워드를 포함한 사례에 한정하여 다문화 담론에 해당하는 약 30건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표 1에 목록을 제시한다.

<표 1> 다문화 관련 사설 목록 (출처: <http://www.kinds.or.kr>)

	사설 제목	신문 / 발행일
1	다문화가족 차별하며 '세계 속 한국' 말하는가	세계일보 2013-02-27
2	'역지사지'로 풀어야 할 다문화사회 갈등	세계일보 2012-07-13
3	다문화 소년의 방화, 우리 사회의 반성	한국일보 2012-05-17
4	'다문화 소년'의 연쇄방화가 말하는 것	경향신문 2012-05-17
5	국내 多文化인식 돌아보게 하는 佛 첫 한국계 장관	문화일보 2012-05-17
6	多文化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자	국민일보 2012-04-20
7	무차별 다문화가정 지원 비판받아 마땅	국민일보 2012-01-17
8	다문화사회 외치며 피부색 차별은 또 뭔가	서울신문 2011-10-15
9	다문화시대 역행하는 인종차별 어찌 퇴치하나	세계일보 2011-10-15
10	국내 다문화 청소년 대책도 시급하다	국민일보 2011-07-26
11	다문화 가정 지원시스템부터 점검하라	서울신문 2010-7-27
12	다문화 유권자의 위상 강화돼야 한다	서울신문 2010-5-19
13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 교육이 없다	국민일보 2010-5-11
14	다문화가정 출신 2년 뒤 국회도 진출해야	서울신문 2010-5-25
15	다문화사회가 고령사회 진입 늦출 수 있다	문화일보 2010-4-6
16	학교 못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국민일보 2010-3-9
17	이중국적 허용 다문화시대의 대세다	서울신문 2010-10-20
18	인종차별은 다문화 해치는 반인륜행위	한국일보 2009-9-7
19	다문화 시대에 더 세밀한 입법·지원책을	세계일보 2009-6-23
20	다문화 시대에 절실한 입법·정책과제	문화일보 2009-6-20
21	오바마 당선에서 다문화 존중 배우자	서울신문 2008-11-7
22	단일민족을 넘어 다문화사회를 생각하는 개천절	동이일보 2008-10-4
23	'다문화가정' 학생 2년새 두 배 늘었는데	세계일보 2008-5-21
24	더 빨라지는 '다문화한국' 시대	한국일보 2007-8-2
25	다민족·다문화사회 가로막는 순혈주의	한국일보 2007-4-17
26	국제결혼 걸맞은 다문화인식 필요하다	서울신문 2007-4-17
27	다문화가정 위한 종합대책 나와야	국민일보 2007-1-22
28	다문화가정 교육에 정부 지원 따라야	경향신문 2006-12-18
29	多文化가정 교육에 정부 나서라	국민일보 2006-12-16
30	현실로 다가온 다민족·다문화시대	서울신문 2005-12-21

### 3. 이론적 배경

#### 3.1. 다문화 개념과 다문화주의 이론

먼저 다문화와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고 담론화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자. ‘다문화’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의미는 그것과 유사한 ‘다인종’, ‘다민족’ 개념과도 함께 언급된다. Kymlicka(1995)는 ‘다문화(multicultural)’란 말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현상을 다민족 사회와 다인종 사회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다민족(multination)’ 사회는 기존의 자치적이고, 전통적인 여러 문화나 소수민족(national minorities)이 전체 국가로 통합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한 사회이고 ‘다인종/복합인종(polyethnic)’ 사회는 개인과 가족 이민을 통해 여러 인종집단(ethnic groups)에 의한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는 다문화사회를 발생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사회 내에 존재하게 되는 여러 층위(인종, 민족, 문화 등)의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각 인종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는 그들의 존재와는 다른 문제로 결국 다문화 정책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달려 있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논의와 가치, 규범 등 다문화주의 담론을 바탕으로 한다. Martiniello(1997)에서는 현대 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경향을 동화주의 대 다원주의, 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 평등주의 대 차별주의라는 이원적 대립으로 설명하는데 각 사회나 국가의 담론 지형에 따라 담론의 특정한 경향이 나타난다.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하는 단계의 ‘온건 다문화주의’에서부터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공공정책, 정체성 정책 등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강경 다문화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원

(2014)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이 국가 주도의 계몽적 담론으로 동화를 지향하고 다문화의 다양한 차이를 흡수하는 담론을 재생산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담론은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즉 정책 모형의 측면에서 동화주의, 다원주의, 차별적 포섭/배제주의로 나뉜다(Martiniello 1997). 동화주의 모형은 이민자나 소수집단을 문화적으로 적응 동화시켜 다수집단에 융해되게 하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소멸시키거나 사적 영역에 은밀하게 보존시키는 입장이다. 다원주의는 소수민족이나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을 공적으로 인정한다. 차별적 포섭/배제주의 모형은 특정집단은 포섭하고 다른 집단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민족공동체는 인정하지만 이민에 의한 소수집단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다. Castles and Miller(2003)에서도 이민자 통합 정책 유형으로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sup>5)</sup>, 다문화 공존 모형(multicultural model)<sup>6)</sup>, 차별적 배제 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sup>7)</sup>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그

- 
- 5) 동화주의 정책에서는 언어 습득과 자녀 교육 등을 통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화를 지원하고, 문화적 차별이나 편견 제거(손철성 2008),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제도화한다. 출신국이나 소수인종 고유 문화에 대한 포기를 강요하지도 않지만 유지를 위해 정책적 지원도 하지 않는다. 외국인 정책 초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1960년대 미국의 용광로(melting pot) 모형, 프랑스의 공화주의 모형 등이 대표적이다(설동훈 외 2006, 박진경 2010).
- 6) ‘다문화주의’와의 혼동을 피하고자 ‘다문화 공존 모형’으로 번역하였다. 다문화 공존 모형의 정책은 국가가 이민자 고유의 다양한 문화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언어와 종교,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는 동화주의가 오히려 인종 간, 민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다문화적 정체성과 다원적 국민성을 지향한다(강희원 2006). 197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등장, 퀘벡 주의 분리 독립 요구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식으로 착안되어 문화적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이 되었다(Kymlicka 1995, 윤인진 2008).

사회의 입장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표 2>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접근법

	동화주의	다원주의	차별적 포섭/배제
목표 및 정향성	소수자의 주류 사회 동화	다양성 인정(용인) 또는 장려	주류 사회의 문화적 단일성 유지
국적 부여	속지주의(용이)	속지주의(이중국적)	속인주의(혈통)
문화 및 정체성	출신국의 문화적 정체성 상실(사적 영역 유지 가능) '국민'(주류 사회)	공적 인정(문화적 정체성 유지 자유)	출신국 귀환을 목적으로 원래의 정체성 유지(문화적 동화 장려하지 않음)
사회적 정책 방향	주류사회의 언어, 문화 습득	차별에 대한 보상 정책 시행(재정 지원 없음)	사회 내 포섭의 국가 통제(이주민 영주 가능성 차단)

사실에서 언급되는 정책이나 가치 규범 등이 어떤 입장을 함의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 모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화주의적 접근법에서는 국적이나 시민권을 비교적 쉽게 부여하며 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학교와 군대 등의 제도를 이용하며 각 시민의 인종이나 민족적 기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원주의적 접근법에서는 소수민족이나 인종집단의 동화보다 공존에 목표를 두어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 물론 적극적인 다문화 공존 정책을 통해 다양성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은 아니며 소수집단의 차별이나 배제를 보상하기 위해 특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차별적 포섭/배제주의에서는 그 사회의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어 이주민 유입을 차단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또는 차별을 유지하고자 한다. 혈통을 중시해

7)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에서는 주로 이주민을 노동시장 영역에만 받아들이며 국적 부여 등 사회, 정치적 영역에는 제한하여 이민자의 정착을 차단한다. 주로 한국, 일본, 독일 등 단일 민족 사회의 역사와 신화가 견고한 국가에서 이루어진다(박진경 2010, 김행열 2013).



국적을 부여하게 되며 귀화의 조건이나 절차도 엄격하다. 3D 직종이나 전문기술인력 이주, 결혼 이민 등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이고 선별적으로 이주민을 수용하는 경우(Martiniello 1997)도 이에 해당한다. 이를 표 2로 정리하였다.

다만 실제 각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므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점과 정책의 실현은 다소 혼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Martiniello 1997).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동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동화주의 사회에서도 다원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화주의적이거나 전적으로 다원주의적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하는 국가나 그 사회의 관점, 그에 대한 담론, 그리고 실제로 채택된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 현실 사이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특히 신문 사설이라는 담론의 영역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의 정책, 다양한 현실을 언급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괴리나 혼재된 양상이 더 잘 드러난다.

다문화사회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논의에서는 Kymlicka(1995)가 언급한 소수집단의 다양성이 늘어난 다인종 사회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정책 요소인 국적, 이주 및 정주에 관한 법적 수단, 언어 및 교육, 문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포함한 다문화주의 담론의 혼재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신문 사설의 담화적 속성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이 신문 사설에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설의 담화적 특징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점은 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명시적으로 주장을 드러내는 담화라는 점과 특정한 가치,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내포한다는 것이다(van Dijk 1995, 1998).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다는 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논평과 의견을 제시해 실질적 행위를 촉구하는 행위이자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 관념이나 여론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담론적 행위로 이해된다. 이는 언론이 국가와 시민 사회, 대중 사이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적 논의에 참여하고 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치담화의 영역에 속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담화가 지니는 논증적 속성(Fairclough and Fairclough 2012)은 사설에도 드러난다.<sup>8)</sup>

특히 사설은 특정한 행위를 주장하고 근거로 뒷받침하는 실천적 추론(practical reasoning)<sup>9)</sup>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에 대한 주장(claim for action), 그것을 지지하는 논거(argument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goals), 제도적 조건이나 사회적 사실을 나타내

8) 논증성은 서로 다른 의견이나 가치를 추구하며 충돌하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른 입장을 설득하거나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담론적 행위로서의 정치담화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한다(Fairclough and Fairclough 2012). 사설 역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적 담론의 일종으로서 이런 속성을 띤다.

9) 실천적 논증은 추론에 참여한 이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판단 결정하는 추론의 과정으로서 그 행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거나 그렇게 행위해야 할 이유나 논거를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밝히는 이론적 논증/추론(theoretical reasoning)과 달리 불확실한 상황과 정보 속에서 결과를 예측하면서 취해야 할 행동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실용적 추론’이라고도 하며 실천이성(practical reason)이 작용한 행위에 관한 논증이라는 점에서 ‘실천적 추론’이라고도 한다.

는 상황(circumstances), 목표가 암시하는 가치(values) 등의 요소가 다문화사회로서의 현실, 규범이나 가치로서의 다문화주의의 일면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사설의 담화적 구조를 밝힌 Bhatia(1993)에서도 사설이 사건 제시(presenting the case), 논거 제공(offering the argument), 평결(reaching the verdict), 행위의 권고(recommending action)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논증에 주목하였다. Bolivar(1994)에서도 상황, 전개, 권고로 유사하게 설명한다. 논거를 제시하고 평결에 이르는 것은 그 자체로 논증의 과정이며 ‘사건 제시’나 ‘상황’ 등 현실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권하는 방식은 실천적 논증의 성격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증성을 중심으로 사설의 구조를 ‘상황-논거-평결(주장)-(행위)권고’로 보되 ‘사건 제시’도 상황의 일부로 이해하여 ‘사건 제시’, ‘상황’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논증의 영역은 ‘논거’, ‘평결(또는 주장)’으로 설명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p>(1) ①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조사해 밝힌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실태는 놀랍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다문화가정 취학연령 자녀 4만2676명의 초·중·고 평균 재학률은 82%에 머물렀다. 고교 재학률은 일반 학생들보다 무려 22% 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뒤늦게 한국국적을 취득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간입국자녀’의 재학률은 47%에 그쳤다.</p>	<p>[사건제시] [상황] 다문화가정의 취학실태(①)</p>
---	---

10) Walton(2007)에서는 실천적 추론이 단순한 도구적 논증(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가치가 작용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value-based practical reasoning’) 그것은 가치가 행위의 도달점인 목표의 타당성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나의 목표는 4시 30분 전에 런던에 가는 것이다./2시 30분 기차는 4시 15분에 런던에 도착한다./그래서 나는 2시 30분 기차를 탈 것이다.’라는 3단 논법의 사례를 들며 이 논증에는 ‘준이 런던을 떠나기 전 나는 그를 만나야 한다’는 우정의 요소가 전제되며 우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가 목표를 바람직하게 하는 요소임을 언급하고 있다.

<p>②그들의 높은 탈학교율은 범죄나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학교를 떠난 학생의 상당수는 가출해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조직 폭력과 성매매 등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p>	<p><b>[논거 제공]</b>                  논거1:                  (예측되는) 부정적 결과(②)</p>
<p>③이들이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는 으뜸 이유는 언어문제다. 일반 학생들처럼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권 교육에 편입되다 보니 수업을 따라가기 벅차다. 자연히 성적은 나빠지고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된다.                  (중략)</p>	<p>논거2:                  부적응, 탈학교율의 원인(③)</p>
<p>④미국의 경우 이민자나 그 자녀들은 어학코스를 밟게 하거나 학교 안에 특별반을 운영, 집중교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민자와 자녀들은 언어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미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p>	<p>논거3:                  긍정적 결과에 관한 해외사례(④)</p>
<p>⑤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⑥다문화가정 자녀만을 위한 대안학교나 정규 학교 내에 이들만을 위한 맞춤형 학급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일보 2010-03-09)</p>	<p><b>[평결] [권고]</b>                  시스템구축(⑤)                  /대안학교나 맞춤형학급(⑥)</p>

사실은 글의 실마리가 되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취학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가 실마리가 되고(①) 논증의 상황이 된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탈학교율이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 즉 예측되는 부정적 결과(②)를 비롯해 탈학교율과 부적응의 주된 원인인 언어문제를 지적한 부분(③), ‘이민자와 자녀들’의 언어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에 적응시킨 미국의 사례 같은 긍정적 결과(④)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다. 이어서 우리 사회도 언어교육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⑤), 구체적 방안으로서 대안학교나 맞춤형 학급(⑥) 등 주장과 권고가 뒤따른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담화의 구조 위에 펼쳐진 다문화주의 담론의 양상을 살펴본다. 사건 제시와 상황 부분에서는 주로 (논증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논증 전개와 결론(평결)에서는 주장과 논거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가치, 정책 방향 등 실질적으로 거론되는 다문화주의의 모습을 살펴본다.

#### 4. 사설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담론의 양상

##### 4.1. 다문화사회에 대한 제한적 담론

사건 제시나 상황 부분에서는 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다룬다. 인구학적 변화를 언급하는 내용에서부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이나 문제 등을 포함한다. 아래 예에서는 이주민, 외국인의 비율이 인구학적으로 늘어난 사회(2)의 ①, ②)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문화사회’(2)의 ④), ‘다문화시대’(3)의 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여러 다른 인종, 민족이 한 사회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한 문화(culture)의 개념까지 내포하지는 않는다. 다문화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한 Kymlicka(1995)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때의 ‘다문화’ 표현은 주로 인종적 소수집단을 가리킴에도 ‘문화’로 표현되어 인구학적 다인종 상태가 곧 사회적 다문화 공존 상태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사설에서는 이와 같은 인구학적 사회 변화에 주목하였고 더 근접한 개념을 표현하는 ‘다민족’(3)의 ①)이란 말을 쓰기도 하였다.

(2) ①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72만 2,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4,909만 여 명)의 1.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②1.1%였던 작년보다 무려 35%나 급증한 수치이다. 한국에 연간 9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작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외국인 급증 추세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③외국인 근로자들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이 늘면서부터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한국이 이제 ④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한국일보 2007-08-02)

(3) 외국인 인구는 연평균 18%씩 늘어나고 있다. 단일민족을 기반으로 한 법·제도의 손질은 물론 ①다민족·다문화 시대 국민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서울신문 2005-12-21)

실제로 법무부(2008)에서도 제 1 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문화사회’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와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 2 세의 증가 등 인구 현상에 관한 것임을 언급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아님을 밝힌 바 있다(박진경 2010). 또한 우리의 ‘다문화’ 개념은 결혼 이주와 노동 이민에 의해 늘어나는(2)의 ③) 다인종/다종족(polyethnic)의 의미에 가까움에도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다인종’, ‘다민족’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는다(3)의 ①).<sup>11)</sup> 벨기에와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는 각 민족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성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이민에 의한 소수인종집단의 다양성은 인정하지 않는 등 정책을 구분하므로<sup>12)</sup> 다문화 담론에서는 이 차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는 국가의 다문화 정책과 담론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된다(각주 4 참고). 아래 예와 같이 대부분의 사실이 다문화가정을 다룸으로써 다문화 개념의 폭과 논의의 한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11) 3.1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민에 의한 다인종/다종족(polyethnic) 사회와 국가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다민족(multinational) 개념은 구분된다. 다만 ‘ethnic’(인종, 종족, 민족)이나 ‘nation’(민족, 국민)이라는 개념은 한국어 번역에 약간의 혼란이 있고 ‘민족’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연원을 구별하는 서구의 논의를 언급하기 위해 ‘인종/종족’과 ‘민족’이라고 구분하였다.

12) 캐나다에서도 다문화주의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일부 프랑스로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이 지닌 민족적 정체성과 그에 대한 다민족 정책을 이민에 의한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정책과 혼동할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Kymlicka 1995).

는 다문화가족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 3 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률상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한정되고 다른 외국인과 그 가족들은 배제된다(박진경 2010). 예 (4)를 보면 국제결혼의 증가나 다문화국제학교 설립 소식이 언급되면서(4)의 ①, ②) 결혼 이주 여성 또는 국제결혼에 의한 가정을 가리키는 ‘다문화가정’이 담론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한다(4)의 ④). 또한 예 (5)에서는 ‘다문화소년’((5)의 ①, ②), ‘다문화인’((4)의 ③) 등이 그 2세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들이 다문화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지칭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문화’란 표현이 협소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4) ①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31만6천여 결혼 중 13.6%인 4만3천 여 쌍이 국제 결혼이다. 8쌍 중 1쌍은 외국인과 가정을 꾸린다는 얘기가. 나라별로 보면 중국과 베트남이 많고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많다. (중략)  
 ②다문화국제교육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이런 아이들 교육을 위해 다문화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고도 안타깝다. “③다문화인이 당당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이 단체 신성록 대표의 말에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이들을 위한 지금의 교육환경이 그만큼 척박하다는 현실을 새삼 확인하기 때문이다. ④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전반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향신문 2006-12-18)

(5) 엇그제 발생한 17세 ①‘다문화 소년’의 서울 화양동 주택가 연쇄방화 사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운운이 현실적으로는 전근대적 인종순혈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따위의 속살을 감추기 위한 거죽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된다. ②러시아에 유학하던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정모군은 아버지가 학업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자 한국의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12-05-17)

이 개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가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혈통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회가 혈통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곧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국적법이 제한하는 혈통이 유지되는 다문화가족/가정에 대상이 한정됨으로써 진행된다. 다문화라는 말 속에는 다문화 논의를 촉발시킨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 위에 혈통을 중심으로 조금씩 인종적으로 확장되는 민족 개념이 함축되는 것이다. 이는 혈통적 연관성이 없는 이들은 배제되며 절반의 혈통이 유지된 국제결혼(5)의 ②) 가족만이 포함되어 다문화 담론이 제한되는 현실을 보여 준다. 살펴본 사설 중에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는 약 20건(전체 30여 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흥미로운 것은 다문화 담론에 있어 외국 사례(사례 5와 21)와의 대비에서 드러나는데 프랑스의 한국계 입양아 출신 장관이나 미국의 흑인 대통령 당선 문제 등 그 사회 내의 다양한 소수 인종과 민족의 문제를 다룬 외국의 사례와 달리 한국의 사례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국한해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예 (6)을 보면 한국계 입양인 출신이 프랑스 정부의 각료로 임명된 사실을 언급하면서((6)의 ①, [사건 제시] 부분) 결혼 이주 여성인 당선자에 대한 인식과 발언을 연관시키고 있다. 이는 후반부에서 촉구하는 인식 변화가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소수 인종의 정치적 권리와 활동에 제약이 없는 외국의 상황과 다문화가정을 제외한 대다수 이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이조차 차단된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출신 여성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편견은 분명 모든 소수 인종들의 가려진 현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

13) 2005년 정부에서는 인구 정책에 관한 국적법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어 단일민족주의가 바람직한지, 혈통주의 외에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를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혈통주의를 중시하는 국민 정서와 인종, 문화적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고 영주권을 지닌 이민자와 자녀가 적어 그 실효성이 적어 보류되었으며 이후 국적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이철우 2014).



<p>(6) ①한국계 입양인 출신이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의 각료로 임명된 것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보편화하고 있는 다문화(多文化) 현상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보게도 한다. (중략)</p>	<p>[사건 제시]</p>
<p>②대한민국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인 이자스민 당선자에 대한 막말과 욕설, 근거 없는 비난이 난무했던 사실이 보여주듯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창피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p>	<p>[상황]</p>
<p>③다문화 인구가 140만명을 넘어선 사회가 ‘외국인 혐오증’의 포로가 돼 있어선 안된다. (문화일보 2012-05-17)</p>	<p>[권고]<sup>14)</sup></p>

#### 4.2. 다문화 이면의 동화주의 담론

다문화 담론의 3분의 2가 다문화 가정 즉 국적이 부여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이나 담론이 주로 동화주의적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Martiniello 1997/2002)을 언급하는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p>(7) 내용 가운데 주목할 것은 ①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혼선이다. ②가령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6%로 유럽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일자리 감소나 재정지출 증대 등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역시 유럽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③다문화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차 정립되어가는 중간 단계인 것으로 추측된다. (중략)</p>	<p>[상황]</p> <p>①, ②, ③ 다문화에 대한 입장 불명확 단계</p>
<p>④국민의 자격을 합당하게 얻었다면 피부색과 출신지가 다르다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우를 해야 한다. ⑤정부는 국민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역에서는 이웃의 동질감을 갖도록 돕는 게 우선이다. ⑥글로벌 시대에 단일 조상을 내세우는 폐쇄적 태도는</p>	<p>[평결][권고]</p> <p>④, ⑤ 국민의 정체성, 동화</p>

14) 예문의 오른쪽에서는 논증의 핵심적 내용을 제시하고 논증의 요소(주장, 논거, 상황, 가치 등)를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낮은 유물일 뿐이다. ⑦융합과 공존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동 력을 만들어 내는 데는 오히려 다문화사회가 낫다. (국민일보 2012-04-20)	⑦ 융합, 다문 화사회
---	-----------------

이 예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을 다른 글로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점을 상황으로 제시하고(②, ③) 그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④)을 내린다. 후반부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사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데 ⑦에 나타난 ‘융합’과 ‘공존’이라는 표현은 막연한 다문화 옹호의 구호로 여겨지지만 맥락을 고려하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국민의 자격을 얻었다면(④) 국민의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⑤)는 논증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접근이 국민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피부색과 출신지가 다르다’고 해도 ‘동질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각각의 혈통이나 인종, 민족적 정체성을 주류의 정체성에 동화시키려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논증은 표면적으로 국민의 정체성 속에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수용하는 듯 보이지만 내국인과의 결혼과 그 2세에만 엄격히 국적을 부여하는 현실(이철우 2014)을 고려할 때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혈통적 정체성을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국적 부여가 용이한 일반적인 동화주의 모형(표 2)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제한된 국민에 대한 동화주의에서도 인종적 문제는 여실히 드러난다. 사례 (8)이 그 예이다. 사설의 앞부분에서는 피부색이 달라 목욕탕에서 쫓겨난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 여성에 관한 사건(①)을 제시하고 있는데 ②에서는 한국 국적을 증명했음에도 피부색이 달라 입장을 거부당한 일과 함께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피부색이 다르면 손님들이 싫어한다’)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에서는 이와 같은 행태를 ‘명백한 인종 차별’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종 차별에 대한 해결책 역시 다문화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로 다루어진다(⑧ ‘인종차별은 죄악이라는 자발적인 인식

전환<sup>15)</sup>. 사설의 [상황] 부분을 보면 인종 차별에 대한 특별법 촉구 활동 (③)이나 국회의 인종차별금지법안 제출(⑤)을 언급하고 있으나 법률 제정 이전에 사회적 인식(⑦)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⑦)으로 마무리된다.<sup>15)</sup>

<p>(8) ①피부색이 다르다고 목욕탕에서 쫓겨난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 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귀화한 한국인이라며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줬지만 ②피부색이 다르면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목욕탕 주인이 탕에 들어가는 것을 끝내 거부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그렇다손 쳐도 곧 학교에 들어갈 아이까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③인종차별금지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이 여성은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목욕탕 주인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④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중략)</p>	<p>[사건제시]</p>
<p>⑤국회에도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인종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인종차별 시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⑥그러나 법률 만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⑦법률 제정 이전에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서가 아니라 히틀러의 ‘집시 청소’에서 보듯 ⑧인종차별은 죄악이라는 국민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p>	<p>[상황]                  ② 피부색에 따른 편견                  ③ 인종 차별 금지법 촉구 활동                  ⑤ 법안 제출</p>
<p>(서울신문 2011-10-15)</p>	<p>[논증]                  ⑥ 논거                  ⑦ 주장 (사회적 인식)                  [권고]                  ⑧ 인식전환</p>

본격적인 동화주의 담론의 양상은 다문화 정책을 국민 전반에 대한 정책 논의로 다루는 데서 드러난다. 예 (9)가 그 예인데 길도는 다문화가정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 사회나 시스템에 동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생각은 표면상으로는 다문화 옹호적인 것으로 비치지만 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서로 다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다문화정책의 실질성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고 받아들여자는 동화주의적 논

15) 같은 사건이 8, 9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논증은 다른 사설에서(표1의 자료 목록 2, 3, 4, 8, 9, 18 등)도 종종 발견된다.

의로 발전한다. 따라서 [논거] 부분에서는 현재의 다문화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문화 정책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가 드러난다.

<p>(9) ①정부의 무차별적인 퍼주기식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일본인 여성 파워블로거의 집중 포격을 받았다. ②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측정해보지도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추진하다 보니 수혜자로부터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12년째 한국에 거주하는 고마츠 사야까씨의 다문화가정 지원 비판은 매우 구체적이라 네티즌들도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③다문화가정의 경우 보육료가 전액 무료이며 공립어린이집 입학도 최우선 대상이라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고 한다. 재산에 따라 보육료 지원액이 결정되고 공립어린이집 입학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서민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④역대 연봉의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가정이 보육료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불균형 현상도 생긴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예산이 무려 2000 억원이었지만 ⑤대부분이 놀이공원 가족초대권, 고향방문항공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과 같은 일회성이나 선심성이 많았다.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한 정책이 없고 단기 시혜성이 많아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 ⑥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느끼는 왕따의 실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단적인 증거다.</p> <p>이처럼 다문화가정 정책이 걸도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도 ⑦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동류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⑧언어와 문화 차이로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이들에게 적응할 능력을 심어줘야 하는 게 우선이며 ⑨경제적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⑩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⑪우리사회에 편입돼 애국심이 절로 우리나라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국민일보 2012-01-17)</p>	<p>[사건제시] ①, ② 다문화가정정책 비판</p> <p>[논거 제시] ③, ④, ⑤ 한국인 역차별, 외국인과 한국인의 불균형</p> <p>[평결] [권고] ⑦, ⑩, ⑪ 동류의식, 애국심(동화주의) ⑧ 언어문화적 동화정책</p>
--	---

앞부분에서 제시한 사건은 현재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다루고 있으며 ‘무차별적 퍼주기식’(①)이며 실속이 없다는(②) 한 일본인 여성 블로거의 비판을 인용하면서 시작된다. 이어서 제시된 첫 번째 논거는 보육료 전액 무료(③), 놀이공원 초대권, 항공권 등 일회

성, 선심성 지원(⑤) 등 정책의 무계획성과 시혜성을 비판한다. 흥미로운 것은 비판의 또 다른 논거로 (다문화 가정이 아닌) 다른 국민들과의 역차별(③), 불균형(④) 문제가 언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의 자유로운 유입을 반대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사회적 구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영역에 한해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자주 언급되는 논거이다(김영명 2013). 따라서 이와 같은 논증에서는 소수 이주민들에게만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보다 국민 일반에 대한 복지 정책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어진 부분에서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경제 지원’(⑨)의 방식을 촉구하는 언급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평결 부분에 나타난 동화주의적 관점(‘우리 공동체’(⑦), ‘우리 사회’(⑩)에 편입되어 ‘동류의식’(⑦) ‘애국심’(⑩)을 갖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언어문화적 동화 정책(⑧ ‘언어와 문화 차이로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이들에게 적응할 능력을 심어줘야’)을 강조하며 이주민만을 위한 다른 정책은 시도하지 않는다.<sup>16)</sup>

다음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동화주의의 정책이 더 강조된다. 두 사례에서 꼽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 (10)에서는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2세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언급하면서(①, ③) 그것이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부당한 대우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④).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방치되었을 때 큰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켜 한국 사회 내부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논거는(④) 논증의 현실성과 설득력을 높인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인 언어 교육 즉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해법이 제시된다(⑤). 사례

16) 이 글의 다른 부분에서 나타난 ‘배려는 하되 신중해야’ 한다거나 ‘다문화 정책의 허와 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자’는 주장 역시 다문화 정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암시한다.

(11)에서도 부당한 대우나 사회적 문제를 주로 의사소통과 연관해 설명하고(①, ②)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동화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이해사업 등을 제시함으로써(④) 동화주의 담론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 준다.

<p>(10) ①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가장 곤란을 느끼는 건 의사소통이다. ② 우리말이 서툴다 보니 가족이나 이웃과 융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주위로부터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고 있다. (중략)                  ③ 다문화 가정의 2세 교육문제도 심각하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언어와 학습 능력 발달에 장애를 겪고 있다. ④ 이들을 방치할 때 조만간 큰 사회문제로 떠오를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부담도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글로벌 시대에 불가피한 추세다. 따라서 이들 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⑤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가족교육,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세계일보2008-05-21)</p>	<p>[논거]                  ①, ② 의사소통의 문제, 부당한 대우                  ③ 2세의 언어, 학습능력 문제                  ④ 사회적 비용, 사회문제 유발</p> <p>[권고]                  ⑤ 한국어교육</p>
<p>(11) ① 다문화 가족 여성들이 가장 곤란을 느끼는 건 의사소통이다. ② 우리 말이 서툴다 보니 다문화 가족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고 있다. ③ 정부가 어제 발표한 ‘다문화 가족 지원 개선 종합대책’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 중심으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만시지탄이지만 긍정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적잖다. ④ 예컨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이해사업이 상호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잘만 실행된다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일보 2009-06-23)</p>	<p>[논거]                  ① 의사소통 문제                  ② 서툰 언어가 부당한 대우의 원인</p> <p>[평결] [권고]                  ④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이해사업</p>

이와 같은 논증은 일차적으로 다문화가정 여성 및 2세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이 사회 안에서의 문화적·사회적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철저히 동화주의적이다. 출신 문화나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비롯해 이주 여성과 2세 사이의 의사소통, 정서적 유대 문제 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철저히 주류 사회의 입장과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이 안고 있

는 또 다른 잠재적 문제나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소외된다.

### 4.3. 다문화 공존을 위한 정책 논의의 가능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다문화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다문화가정이라는 제한된 범주 안에서 그들을 동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실질적 의미의 다문화 공존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진 못했으나 최근에 언급되는 몇 가지 사안들을 중심으로 그 논의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다문화주의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인 국적 제도와 이주민 수용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사하는 인구정책 문제이다. 예 (12)는 인구학적 의미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언급하며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인구정책으로 표현되었으나 사실상 이주민 유입 및 국적 정책으로 연결된다. 주로 노동력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논거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구호에 머물지 않는 현실적 고민과 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핵심 주장은 이주민과 외국인 유입을 인구 정책의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7)으로 사실상 이주 또는 정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인구정책과 노동력, 세수와 재정 문제 등 경제적인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 사회에서(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문제(2)를 해결하는 방안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등 이주민과 외국인을 수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유입이 노령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인구사회학적 논거(5)로도 뒷받침된다.

(12) ①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인 현재의 한국이 40년 후에는 이미 오랫동안 초고령화사회가 진행된 상태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

[상황]

① 고령화사회,  
②저출산 현상

<p>기구(OECD)는 5일 각국별 인구 추계를 통해 2050년에는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4.4%를 차지해 초고령사회 진입 기준인 20%를 훨씬 넘어설 뿐 아니라 80세 이상도 12.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②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더욱 재촉하는 요인이 저출산 현상임은 물론이다. (중략)</p>	
<p>③205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현재와 같은 1.1명대를 유지해 나 갈 경우 노인 세대를 먹여 살릴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면서 정부의 세수(稅收)부족과 연금재정 파탄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p>	<p>[논거] ③ 경제적 근거 (부정적 결과)</p>
<p>④정부는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출산촉진 정책을 강화 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p>	
<p>⑤그런 가운데 출산장려책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할 분야가 외국인 유입이라는 점이 통계자료로 입증되고 있다. 통계청이 2006년에 내놓은 추계 인구는 2009년 4874만 7000명으로 2005 년의 4813만 8000명보다 60만 9000명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 로는 1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국인 유입 인구가 가장 큰 변수였다는 분석이다. 국제결혼이나 외국인노동자 유입 활성화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정착될 경우 자연히 향후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 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p>	<p>⑤ 인구사회학 적 근거(긍정적 결과)</p>
<p>⑥인구 변화에는 출산·사망률과 함께 국제이동이 주요 변수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이를 간과해온 측면이 있다.</p>	
<p>⑦최근의 외국인 유입 통계치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문화사 회를 인구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시야를 넓혀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문화일보 2010-04-06)</p>	<p>[평결] ⑦ 외국인 유입, 인구정책</p>

두 번째로 논의되는 문제는 이주민과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출신 여성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다룬 예 (13)은 그것이 선거 과정의 이벤트일 수 있음에도 정치 참여 문제를 제기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권고] 부분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표하는 실질적 의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2)과 함께 그 근거로 실제 다문화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나 현실을 반영하는 입법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3), 인도적 차원, 국익 등(4)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p>(13) ①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광역의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비례대표로 공천한 서울시의원, 경기도 의원, 대전시의원 후보 등 3명이 당선권에 들어 있다. 필리핀 출신 자스민, 일본인 출신 이연화, 태국 출신 낫티타씨 등이 주인공이다.</p> <p>②이들이 선거 이벤트 차원의 공천을 넘어서 국내 체류 외국인 110만명을 대표해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해내길 기대한다.</p> <p>③우리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기능을 갖추어야 할 때다. (중략) ④이는 인도적 차원일 뿐 아니라 국익을 향상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서울신문 2010-05-05)</p>	<p>[사건 제시]</p> <p>①다문화가정 출신 공천</p> <p>[권고]</p> <p>[논거]</p> <p>③다문화사회 현실</p> <p>④ 인도적 차원, 국익</p>
<p>(14) ①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다문화 관련 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모임이 결성될 전망이다. 서울 YMCA와 서울YWCA, 홍사단 등 9개 단체는 이런 내용의 ‘다문화 유권자 연대’를 결성하기로 하고 어제 실무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②결혼 이주여성, 한국귀화 외국인 등 다문화 출신 외국인 유권자들이 서로 뭉쳐 투표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이다.</p> <p>③국내 체류 외국인 110만명 중 유권자는 1만 1678명이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19살 이상,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 6500여명에게 투표권이 처음 부여된 지 4년 만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다.</p> <p>④우리나라는 사실상 원조 다문화 가정 수출국이다. 18세기부터 러시아와 중국에 이주해 정착했고, 일제 치하에서 강제동원이나 위안부의 이름으로 이역만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중략) 베트남전쟁이나 중동 진출도 빠질 수 없다.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품을 내줘야 할 이유는 자명하다. (중략)</p> <p>⑤ 나아가 선거권을 가진 다문화 가정 출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와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가족, 미등록 노동자에게도 공생과 공영의 손길이 미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문화 유권자의 위상 강화해야 한다. (서울신문 2010-05-19)</p>	<p>[사건제시]</p> <p>①다문화 유권자 연대 결성</p> <p>[상황]</p> <p>③외국인 유권자 증가</p> <p>[논거]</p> <p>④이주의 과거사</p> <p>[평결]</p> <p>⑤ 모든 이민자,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에 확장</p>

예 (14)에서는 다문화 유권자를 비롯한 외국인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를 다룸으로써 논의를 더 발전시킨다. [사건 제시]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다문화 유권자 연대의 결성을 계기로 다문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①) [상황]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6500여 명에게 처음 투표권이 부여된 이후 2010 지방선거에서 3회째 실시되는 외국인 투표권(③)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평결]에서는 미등록자와 국적이 없는 외국인을 비롯해 모든 이주민에게도 확장되어야 함이 언급된다(⑤).<sup>17)</sup>

물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외국 국적의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순전히 다문화 공존주의적 발상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차별주의적 제도를 지닌 국가에서도 전문적 기술을 지닌 우수 인력에 대해 국적과 정주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박진경 2010).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건은 국적 부여의 원칙과 제한성, 그들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논의의 기회가 되어 우리가 다문화사회의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한다. 다만 이 논증에서는 여전히 그 논거를 전쟁과 식민지 경험, 강제 이주 등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음으로써(③) 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도적 관점에 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국가의 다문화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려면 이주노동의 불가피성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대한 타당한 진단과 현재의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진 사안은 다문화주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국적에 관한 것이다(⑫). 노동력의 전세계적 이동이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에 기반한 현상임을 생각할 때 노동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도, 억제하기도 하는 국적, 영주권 정책은 다문화사회를

17)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이 아닌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권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004년 주민투표법을 시발점으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선거에 한해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체류 자격이 있는 제한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다. 2006년, 2010년,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시행, 2014년 전국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른 외국인은 48,401명에 이른다(아시아투데이 2014-5-22 일자)

실현하는 관문이자 다문화주의 담론의 전제가 되는 사안이다(Castles & Miller 2003). 출신국의 정체성이나 문화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이전에 용이한 국적 취득과 유지, 이중국적의 보유 가능성 등이야말로 다문화가정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불법 체류 노동자의 문제도 이와 같은 제도적 현실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p>(15) ①법무부와 미래기획위원회가 <u>이중국적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u></p>	<p>[사건제시] ① 이중국적</p>
<p>②당초 정부의 추진방향은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국인의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③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소수 특권층에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④당당히 병역을 마친 이들에게 이중국적 허용기간을 늘리는 안에 국민들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p>	<p>[논거] ②우수인력 확보 ③소수 특권층 혜택 비판(반론) 방어</p>
<p>⑤당장 이중국적 전면허용이 가져올 부작용을 염려해 ‘최고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군필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p>	<p>[평결 1] ⑤이중국적 허용 (주장)</p>
<p>⑥정부의 이중국적 규제완화안은 저출산 대책과도 맞물려 있다. ⑦그러나 우수한 인재와 군필자에게만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것은 <u>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u> 단계적으로라도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종합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p>	<p>[논거] ⑥저출산 대책 연관 ⑦형평성(반론)</p>
<p>⑧우리의 필요에 따라 입국시킨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이들과 그 자녀들도 <u>형평성 차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서울신문 2009-10-20)</u></p>	<p>[평결 2] ⑥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확대 (주장)</p>

그러나 예 (15)에서는 다문화시대의 흐름을 배경으로 국적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사실상 내국인의 이중국적 허용 문제를 다룸으로써 본질을 벗어난다. 새롭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주민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③)으로 언급되는 내국인,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일 국적 제한으로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기득권 뿐만 아니라 국적이라는 기득권도 이미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기된 비판(③)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리하여 도리어 다문화공존주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면도 있다. 이 글은 두 가지 주장을 중심으로 논증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논거를 통해 더 강하게 부각된 주장은 내국인(군필자)의 이중국적에 관한 것이다(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장은 첫 논증의 반론을 의식한 것으로 형평성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이주민들의 국적 문제가 이중 국적 유지 이전에 한국 국적 취득의 제한에 관한 것임을 생각하면 본래 의도한 핵심 주장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진정 공존을 위한 것이라면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의 원칙부터 논의되어야 할 일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에서는 진정한 ‘다문화사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 구호만을 외쳐 왔다. 일방적으로 다문화적 가치가 옹호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이주민이나 외국인과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윤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실질적인 문화 간 공존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에 동화시키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이주민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주민의 유입을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와 현실 속에서 민족의 혈통이 일정 정도 유지되는 다문화가정에 한정된 담론은 그러므로 두 겹의 장벽을 두른 채 아주 강력한 동화주의의 양상을 띤다. 이는 단일 민족의 개념을 국민으로 대체했다기보다 혈통과 피부색을 희석하며 조금씩 민족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사설에서 살펴본 동화적 담론의 구체적 양상 역시 이를 드러내듯이 주로 언어, 문화적 적응

과 인종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담론 속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전체에 대한 정책이 다문화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겪었던 다문화 사회의 현실은 선부른 동화주의가 또 다른 갈등과 위험을 안고 있음을 끊임 없이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권리나 국적법 문제 등 다문화적 공존을 위해 논의되는 최근의 사안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내의 기득권과 이익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 공존의 가치는 다양한 문화를 관용하고 향유하는 데에 앞서 그들의 존재가 생존하게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개인이 아닌 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화를 통해 공존을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참고 문헌>

- 강희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쪽~34쪽. 한국공공관리학회.
- 김영명(2013). 한국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政治外交史論叢> 35-1, 141쪽~174쪽.
- 김현강(2015). 한국 사회 다문화 담론의 논증 분석, <한국어교육> 2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7쪽.
- 법무부(200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보고서.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72쪽~103쪽.
- 이철우(2014). 국적법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현실: 시민권정책지수에 기초하여, <법과 사회> 46, 법과사회이론학회. 425쪽~468쪽.
- 문재원(2014). 다문화주의 담론의 재구성에 대한 고찰,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3. 161쪽~187쪽.

- 박진경(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한국정책학회. 259쪽~288쪽, 420쪽.
- 손철성(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 107, 대한철학회. 1쪽~26쪽.
- Bhatia, V. K.(2003). *Analyzing genre: Language use in professional setting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Castles, S. & Miller, M. J.(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 New York: Guilford Press.
- Fairclough, I. & Fairclough, N.(2012).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 Kymlicka, W.(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 Press.
- Lemaitre, G. & Thoreau, C.(2006). *Estimating the Foreign-born Population on a Current Bas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Martiniello, M.(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윤진 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van Dijk, T. A.(1995). Discourse semantics and ideology. *Discourse and Society* 4(2), 243-289.
- van Dijk, T. A.(1998). *Ideolog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London: Sage Publications.
- Walton, D.(2007). *Media Argumentatio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김현강(Kim Hyungang)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화번호: (02) 2123-4047

전자우편: hyunkang@yonsei.ac.kr

접수일자: 2015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9월 18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21일